



07-12 (통권 243호)

200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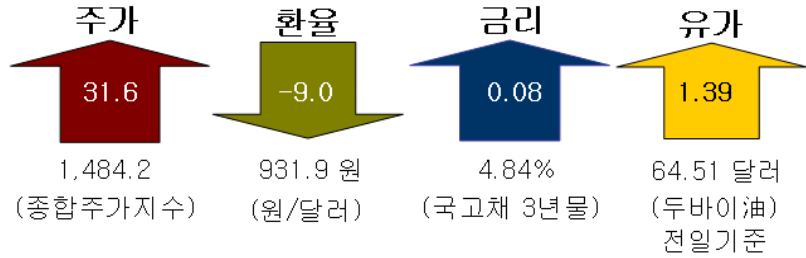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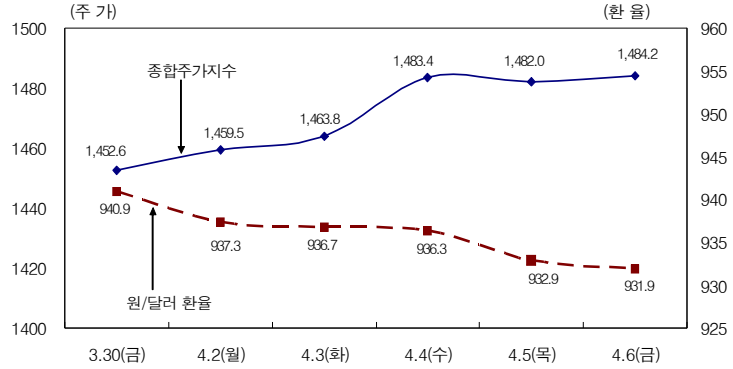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뛰어나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

**BETTER THAN
THE BEST!**

月間 主要 經濟 指標 (3.30~4.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	1
주간 경제 동향	15
□ 실물 부문 : 2월 생산 증가세 둔화	15
□ 금융 부문 : 주가, 금리, 환율의 트리플 강세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an@hri.co.kr)
 □ 거시경제실 : 한 상 곤 연구위원 (3669-4120, sghan49@hri.co.kr)

Executive Summary

□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

1. 법인세 인하 논란

(개요) 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중이다.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OECD 국가들로부터 아시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세 인하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와 손실에 있다. 인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 설비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조세 수입 증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우리의 법인세율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지 않으며, 법인세율 1%p 인하시 1조 5천억원의 세수감소(재정부 추산)가 우려되어 감세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효과) 법인세 인하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내국기업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활동 촉진이 가능하다. 셋째, 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로 법인과 개인의 과세베이스를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제적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반론) 반면,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 하나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당장의 세수 감소 효과는 명확한 대신 투자 촉진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세수 증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레이건 행정부에서 채택했던 공급주의 경제정책에 근거하는 바가 크다. 공급주의 경제학파는 래퍼곡선(세율과 세수간의 상관관계)을 이론적 근거로 제공하는데, 래퍼곡선의 실증적 추정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세율 인하로 세수가 증대될지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법인세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도 명확한 결론을 내릴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중 하나로서의 효과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외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비용, 노사관계, 시장규모, 생활환경 등 많은 고려 요소가 있으며, 법인세율은 그중 하나일뿐이다.

(법인세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제 개편은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경쟁 상대국 대비 경쟁력을 가지느냐의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하가 외자유치나 설비투자 확대에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서의 의미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부문간 조세 형평성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수서비스 부문의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조세감면 등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은 주로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수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2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누진세제를 경제 현실에 맞도록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법인세 과표는 1990년 세제개편 때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로 지난 17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인들의 과세대상이익이 최대 수조원까지 달하는 상황에서 1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만 구분하여 일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2. 한국의 법인세 현황 분석

(명목 법인세율 비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이 1990년 34%에서 2007년 25%로 꾸준히 인하되어왔다. 독일(25%)을 제외한 OECD 주요국가들의 명목 최고세율은 대체로 30~35%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쟁 상대국은 대만 25%, 싱가포르 20% 등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명목 최고세율만으로 판단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적정 수준인 것처럼 보인다.

(법인세 부담) 명목세율의 꾸준한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오히려 가중되어 왔다. 1991년에는 명목 최고세율 34%, 법인세수 3조 2,261억원이었다. 그러나, 명목 최고세율이 25%로 인화된 2005년의 법인세수는 29조 8,055억원에 달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명목GDP성장률은 6.7%이나, 법인세 증가율은 10.8%에 달한다.(4.1%p 초과) 이에 따라 법인세 수입의 대 명목GDP 비중은 1993년 2.0%에서 2005년 3.7%까지 급증하였고, 법인세의 대 국세수입 비중도 1993년 16.1%에서 2005년 24.8%로 증가하였다. OECD 주요국의 경우, 법인세의 대 명목GDP 비중은 2004년 기준 1.6%(독일)~3.7%(일본)로 우리나라는 그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의 대 국세수입 비중은 4.5%(독일)~8.7%(미국) 수준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총 국세수입 대비 개인 소득세 부담은 1990년 21.1%에서 2004년 13.6%로 낮아져 법인세가 소득세 감소분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2004년 OECD 주요국 소득세 부담 프랑스 17.0% ~ 미국 34.7%)

(유효법인세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측정하는 유효법인세율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한국의 영업이익 대비 평균유효법인세율은 1996년 16.29%에서 2003년 24.25%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OECD 주요국과는 비슷하나, 대만과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10~15%p 높다. 특히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의 유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유효법인세율) 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이 제조수출 부문에 집중되어 각

산업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내수와 고용유발에 효과가 큰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등과의 격차가 심하다. 산업별 유효법인세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2000~2005년 기간 중 최저 19.7% ~ 최고 25.1%로 평균 21.4% 수준이며, 건설업도 제조업과 유사하다. 반면 도·소매업, 전기가스업, 사업서비스업은 최저 22.7% ~ 최고 48.2%로 제조업과의 격차가 도·소매업 6.6%p, 전기가스업 11.6%p, 사업서비스업 17.0%p에 달하고 있다.(2000~2005년 6개년 평균)

(기업규모별 법인세 부담) 법인세 과세표준이 물가상승, 경제규모 증대, 기업 수익력 확대 등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고정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법인세 과표는 1990년 세제개편 때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지난 17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 1억원 초과기업의 수 및 법인세액 구성비도 점차 증가하여 2000년 각각 13.5%와 96.6%에서 2005년에는 15.6%와 97.9%로 증가하였다.

3. 개선 및 보완 과제

(개선 과제) 첫째, 주요 경쟁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법인세의 인하가 필요하다. 특히,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 및 경쟁 대상국의 법인세 인하가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둘째, 산업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내수서비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 조세감면정책을 재검토하여 수출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세제지원 정책을 내수서비스 부문에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누진세 체계 개편을 통하여 경제 여건 변화를 세제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해줘야 할 것이다. 과표기준을 기업 규모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고, 2단계로 단순화되어 있는 누진체계를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초대형 기업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3~4단계 내외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완 과제) 반면 법인세 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완과제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내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제 개편과 함께, 각종 규제완화, 투자 인센티브 확대,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 노동 관련 제도 정비, 외국인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 세수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징수체계 재정비, 재정 효율성 제고 등의 보완조치도 필요하다.

<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 >

법인세 인하 논란	<p>▣ 세계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법인세 인하 계획
	<p>▣ 국내 법인세 인하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인하 효과) 외국인 투자 유치, 내국 기업의 투자 유인, 중장기 세수 증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 등 · (문제점) 법인세 1%p 인하시 세수 1조 5천억원 감소, 투자 촉진 등 성장 활력 제고 효과는 불확실
	<p>▣ 법인세 논의의 새로운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법인세의 세계 주요국 대비 경쟁력 수준 평가 · 산업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 검토 · 누진세제 정비 필요성 검토

한국의 법인세 현황 분석	법인세 부담	<p>▣ 한국의 명목 최고세율은 높지않은 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25%, OECD 주요국 30~35%, 대만 25%, 싱가포르 20% <p>▣ 그러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은 매우 높은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명목GDP 비중 : 한국 3.5%, OECD 주요국 1.6~3.7% · 대 국세수입 비중 : 한국 24.8%, OECD 주요국 4.5~8.7% · 유효법인세율 : 한국 24.3%, OECD 주요국 25% 내외, 대만 11.0%, 싱가포르 14.9%
	산업간 법인세 형평성	<p>▣ 수출·제조업 편중 세제지원, 내수·서비스 부문 형평성 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법인세율 : 제조업 21.4%, 전기가스업 33.0%, 도소매업 28.0%, 사업서비스업 38.4%
	기업 규모별 형평성	<p>▣ 중소기업에 불리한 누진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2단계 누진제 :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이상 25% · 과표 1억초과 기업 법인세 비중 : 95.2%('00) → 97.6%('05)

개선 및 보완 과제	<p>▣ 개선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법인세 인하 필요 · 내수, 서비스 부문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 · 법인세 누진 체계 개편(3~4단계로 세분화, 과표 현실화)
	<p>▣ 보완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개편 효과 극대화를 위한 내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정책 병행 · 단기 세수감소 대응 병행(지하경제 양성화, 징수체계 강화, 예산 효율성 제고 등)

□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

1. 법인세 인하 논란

1) 세계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과 국내의 인하 논쟁

○ 세계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

- 최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인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가시화
 - 독일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실효세율(법인세수/과세대상 이익)을 현행 38.9%에서 2008년까지 29.8%로 낮추기로 함
 - 프랑스도 현재 34.4%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앞으로 5년 내 20%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검토 중임
- 아시아 지역 국가들도 외국기업 유치에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가세
 - 세계개혁을 통한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현행 20%의 법인세율을 조만간 18%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도 올해와 내년에 법인세율을 각각 1%씩 내려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보다 낮은 16%의 세율 유지 전망

○ 국내의 법인세 인하 논쟁

- 최근 들어 우리나라 법인세율 수준의 적정성 관련 논쟁이 일고 있음
 - 논쟁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선진국이나 경쟁국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에 있음
- (반대 의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주요 선진국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들어 법인세 인하에 반대
 - 현 법인세율(명목 최고세율 25%)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동남아 경쟁국과 비교해서도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며,
 - 법인세율 1%p 인하시 조세수입은 1조 5천억 원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요 논지임

- (찬성 의견)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조세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 법인세 인하는 투자 등 기업 활동 촉진과 이를 통한 고용증대로 연결되고
 -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과세베이스 확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
 -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음

2) 법인세 인하의 효과 및 문제점

○ 법인세 인하의 효과

- 첫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촉진
 - 아일랜드의 경우 1986년 GDP대비 국가부채가 120%에 달하는 등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았으나, 이후 법인세 인하와 해외 직접투자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회생 정책의 성공으로 2006년 현재 5.1%의 견실한 경제성장률 기록
- 둘째, 내국기업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활동 촉진과 이를 통한 실업난 해소
 -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주요 국가들은 1990년대 말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실질 경제성장률이 2003년 이후 회복세 반전
- 셋째, 법인과 개인의 과세베이스 확대로 중장기적 세수증대 효과 기대
 - EU 주요 국가들은 90년대 말 법인세 인하로 일시적인 세수 감소를 경험하였으나, 2003년 이후로 경기 회복과 함께 다시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

< OECD 주요국들의 법인세수 추이 >

(프랑스·독일 : 백만 유로, 영국 : 백만 파운드)

	2000	2003	2004
프 랑 스	44,429	39,585	45,758
독 일	37,076	27,252	34,642
영 국	34,662	30,772	33,979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 넷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국제적 가격 경쟁력 제고

-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재무구조 개선과 가격 경쟁력 제고에 효과가 있음

○ 법인세 인하시 문제점

- 법인세 인하의 세수 감소 효과는 명확한 대신 투자 촉진 효과는 불분명함

- 법인세 1%p 인하는 단기적으로 세수 1조 5천억 원의 감소 효과가 나타남 (재정경제부 추산)
- 반면, 감세 정책의 투자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실증 연구가 되어있지 못함¹⁾

※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확대하고 세수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공급주의 경제학파의 래퍼곡선(Laffer Curve)에 근거함

- 레이건 대통령은 공급주의 경제학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 및 자본 소득의 한계세율 인하, 규제 완화 등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시행한 바 있음
- 다만, 래퍼곡선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최적 세율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감세 정책이 세수를 증대시킬지 아니면 감소시키게 될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공급주의 경제학파와 래퍼곡선' 참조)

- 또한,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중 하나로써의 효과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외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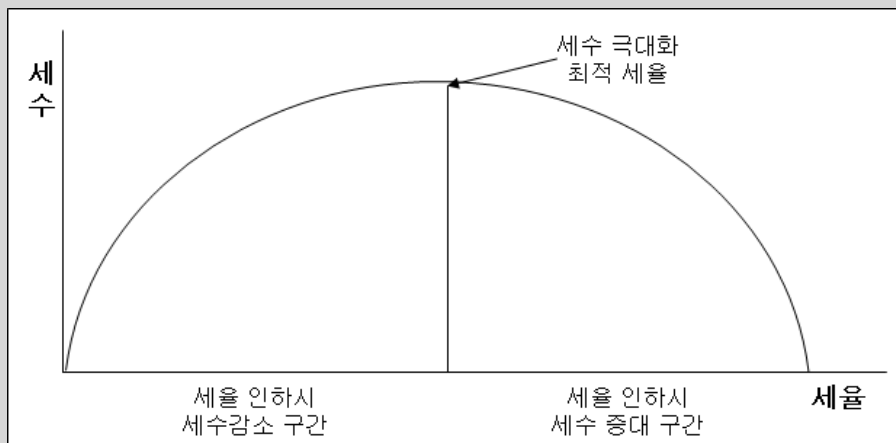
-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비용, 노사관계, 시장규모, 생활환경 등 많은 고려 요소가 있으며,
- 법인세율은 많은 고려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함

1) 법인세 인하의 투자 확대 효과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2004년에 발표된 “기업의 조세 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재정포럼」, 2004.8)과 2005년에 발표된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분석”(한국조세연구원, 2005.12)이 있음. 2004년 연구에 의하면 법인세와 순투자의 탄력성 계수는 $-0.131(t=5.28)$, 법인세와 총투자의 탄력성계수는 $-0.0703(t=4.04)$ 인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감면이 투자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러나, 2005년 연구에서는 2004년 연구의 데이터 처리 오류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 문제를 처리하고 새롭게 분석한 결과 탄력성계수는 전반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여 법인세 인하의 투자 확대 여부에 대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임.

< 참고 : 공급주의 경제학과 래퍼곡선 >

- 래퍼가 창안한 래퍼곡선은 공급주의 경제학을 지탱하는 지주의 역할을 하였으며,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
 - 공급주의 경제학파는 노동시장이나 생산함수 등 공급측면을 강조한 학파로 소비, 투자 등 수요측면을 강조한 케인즈 학파와 구별됨
 - 공급주의 경제학은 공급측면에서 조세감면의 유인 효과를 강조하였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Laffer), 펠드스타인(Feldstein) 등이 주도하였음
- 래퍼곡선은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임
 -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는 늘어나지만, 최적세율을 넘으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음
 - 현재의 세율이 최적세율을 초과한 상태에서의 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 촉진, 노동공급 증대, 비효율적인 조세회피 노력 감소 등으로 과세베이스를 확대함으로써 세수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
- 래퍼곡선은 법인세 인하 주장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나, 현재 세율이 래퍼곡선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님
 - 현재의 세율이 최적세율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세율 인하로 세수 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왼쪽에 위치한다면 세수가 감소하게 됨
 - 레이건의 경제정책도 전반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감세 정책은 당초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정부의 재정 부실화만 키웠다는 비판도 받음

< 래퍼곡선의 기본적 형태 >



3) 법인세 인하 논쟁의 올바른 방향

- 첫째,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경쟁 상대국 대비 경쟁력을 가지느냐의 문제 인식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는 해외 직접투자의 국내 유치, 국내 산업의 해외유출 방지 등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임
 - 특히, 명목세율 자체보다는 실질적인 세부담을 측정하는 유효세율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 법인세 인하의 필요가 있을 경우 단기적인 세수 감소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산업부문간 조세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수 부문에 성장동력이 확충되어야 하나
 - 그동안 조세감면 등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은 주로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 내수와 고용유발에 영향이 큰 내수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것이 사실임

- 셋째, 현재 2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누진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법인세 과표는 1990년 세제개편 때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로 지난 17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고 있음
 - 법인들의 과세대상이익이 최대 수조원까지 달하는 상황에서 1억원의 과표 구분은 너무 비현실적이며,
 - 또한, 1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만 구분하여 일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므로,
 - 법인세의 과세 대상 이익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간별 법인세 차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의 법인세 현황 분석

○ 명목 법인세율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1990년 34% → 2007년 25%로 꾸준히 인하되어옴
·1억 원 이하는 13%, 이상은 25%를 적용하는 2단계 누진적 형태임

< 우리나라의 명목 최고 법인세율 변화 추이 >

(단위: %)

년 도	1990	1993	1994	1995	2001	2005
명목 최고법인세율	34	32	30	28	27	25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명목 최고세율만을 보면 적정 수준인 것처럼 보임
·미국, 프랑스 등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싱가포르 등 경쟁 상대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임
·다만, 명목세율은 과표나 조세 감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정확한 조세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유효법인세율의 검토가 필요함

< 국가별 명목 최고 법인세율 비교(2007년 현재 기준) >

(단위: %)

국 가	프랑스	독 일	영 국	미 국	일 본	대 만	싱가포르	한 국
최고 법인세율	33.3	25.0	30.0	35.0	30.0	25.0	20.0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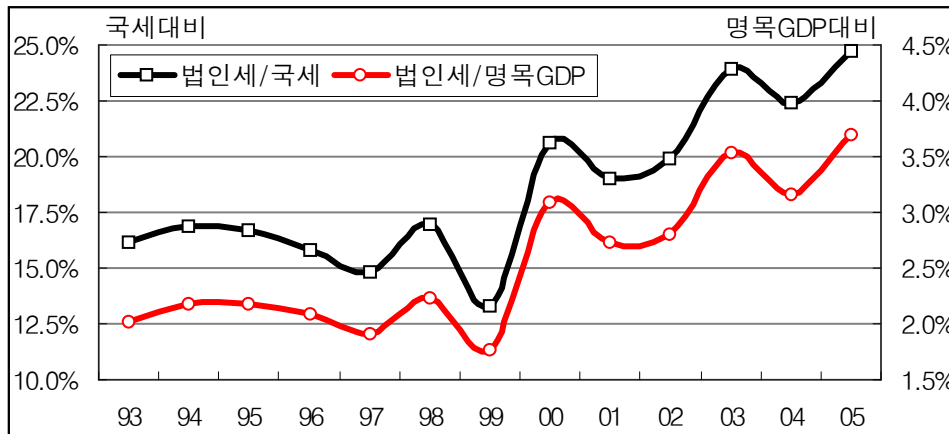
자료 : 재정경제부

○ 법인세 부담

- 한국은 꾸준한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가중되어 왔음
·1991년에는 명목 최고세율이 34%, 법인세수 3조 2,261억 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명목 최고세율은 25%로 낮아지고, 법인세수는 29조 8,055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법인세수 증가는 우리의 경제규모나 총 국세수입의 증가와 비교할 때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임
 - 특히,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96년 9조 3,560억 원에서 '05년 29조 8,055억 원으로 연평균 10.8%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명목 GDP 성장률 6.7%를 4.1%p나 초과하는 것임
 - 이에 따라 법인세 수입의 대 명목GDP 비중은 1993년 2.0%에서 2005년 3.7%까지 급증하였음
 - 법인세의 대 국세수입 비중도 1993년 16.1%에서 2005년 24.8%로 증가

< 우리나라 법인세의 국세 및 명목GDP 대비 비중 추이 >



- 법인세의 대 명목GDP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하여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4년 기준 한국의 대 명목GDP 법인세 비율은 일본과 비슷한 3.5%를 기록하고 있음
 -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는 0.6~1.9%p나 높은 상황임

<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 부담 >

(단위: %)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1995	2.1	1.0	2.8	2.9	4.3	2.4
2000	3.1	1.8	3.6	2.6	3.7	3.3
2004	2.8	1.6	2.9	2.2	3.7	3.5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OECD, 『Main Aggregates』, 2006

-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4년 현재 14.3%로, 선진국에 비하여 과도하게 법인세 부담이 큰 상황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총 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이 4.5~8.7%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14.3%에 달하고 있음

< OECD 주요국들의 총 국세 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

(단위: %)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한국
1990	5.3	4.8	9.9	8.9	13.5
1995	4.9	2.8	8.0	10.3	12.3
2000	6.9	4.8	9.8	8.7	14.1
2003	5.7	3.5	7.9	7.9	15.3
2004	6.3	4.5	8.1	8.7	14.3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 반면, 2004년 총 조세수입 대비 개인 소득세 비중은 13.6%를 차지하여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임

·한국은 1990년 이후로 총 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증가한 반면 개인 소득세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소득세 감소분을 법인세가 대체하고 있음

< OECD 주요국들의 총 조세 수입 대비 소득세 비중 추이 >

(단위: %)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한국
1990	10.7	27.6	29.3	37.1	21.1
1995	11.4	27.5	28.6	35.8	19.2
2000	18.0	25.3	29.3	41.9	14.6
2003	17.5	23.9	28.8	35.2	12.7
2004	17.0	22.8	28.7	34.7	13.6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측정하는 유효법인세율도 꾸준히 증가해왔음
 - 한국의 영업이익 대비 평균유효법인세율은 1996년 16.29%에서 2003년 24.25%로 증가세를 지속해 왔음
 - 선진국과는 비슷한 수준, 경쟁 상대국인 대만, 싱가포르에는 10~15%p 높음
 - 특히,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의 평균유효법인세율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 영업이익 대비 평균유효법인세율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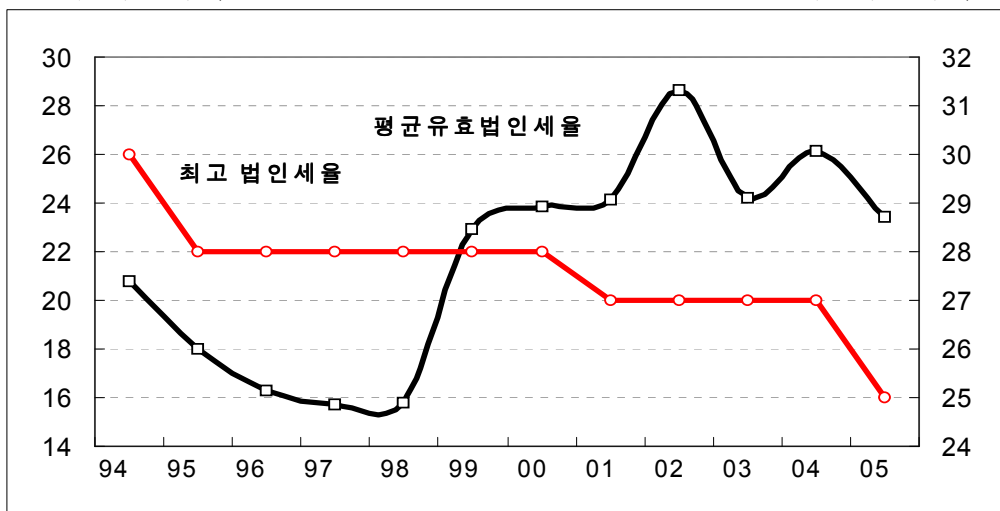
	프랑스	영국	미국	대만	싱가포르	한국
1996	28.08	22.58	29.14	13.63	23.57	16.29
1997	28.63	24.65	29.96	12.34	25.42	15.75
1998	29.12	29.13	29.43	12.15	24.26	15.78
1999	29.60	26.72	30.11	14.64	21.56	22.92
2000	31.11	24.49	31.33	14.39	20.60	23.83
2001	30.15	23.22	27.07	13.28	24.11	24.13
2002	30.66	26.83	26.61	13.01	21.17	28.63
2003	24.98	25.90	26.84	10.95	14.87	24.25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법인세 부담 연구』, 2004

< 평균유효법인세율과 명목 최고 법인세율의 변화 추이 >

(평균유효법인세율, %)

(최고 법인세율,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법인세 부담 연구』, 200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산업별 법인세 부담

- 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이 제조 및 수출 관련 부문에 집중된 결과 국내 각 산업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임
 -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등 노동 집약적인 산업부문에 대한 차별적 법인세 부담은 산업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산업별 유효법인세율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 건설업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2000~2005년 기간 중 최저 19.7%에서 최고 25.1%로 평균 21.4%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에도 2000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부담이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반면 전기·가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은 최저 22.7%에서 최고 48.2%까지 분포되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산업별 유효법인세율 추이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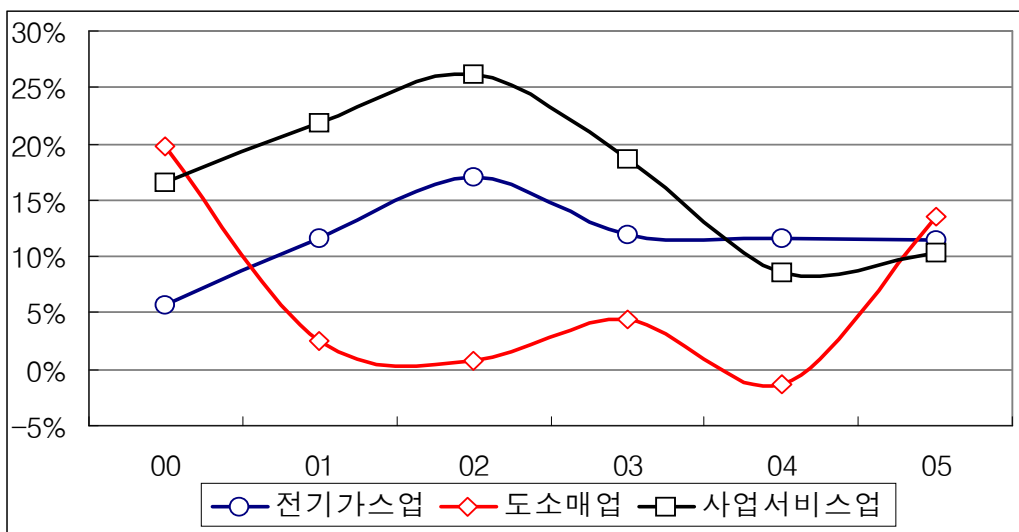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	19.7	20.8	22.0	19.8	25.1	21.1
건설업	34.1	17.7	19.8	21.7	25.0	18.9
전기·가스업	25.4	32.4	39.1	31.8	36.8	32.6
도·소매업	39.5	23.3	22.7	24.2	23.8	34.7
사업서비스업	36.2	42.7	48.2	38.4	33.7	31.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산업별 유효법인세율 격차를 살펴보면, 사업서비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유효법인세율 격차는 2000년에 19.8%p에서 점차 낮아지다가 2005년 들어 다시 13.6%p로 급등(6년 평균 6.6%p)

- 전기가스업과 제조업간의 격차는 2005년 현재 11.5%p에 달하고 있음(6년 평균 11.6%p)
- 사업서비스업은 2005년 현재에는 10.4%p를 기록하고 있으나, 2002년에는 최대 26.2%p까지 확대된 바도 있음(6년 평균 격차 17.0%p)
- 이와 같이 제조업과 비제조업간의 법인세 부담율이 격차를 보이는 것은 각종 조세 감면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산업별 법인세 부담율의 제조업 대비 격차 추이 >



○ 기업규모별 법인세 부담

- 2005년 기준 자산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이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법인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법인은 564개로 전체 법인수의 0.2%에 불과하지만 총 세액은 16조 2000억 원으로 전체 법인세액의 60.6%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산규모를 500억 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할 경우 법인 수는 5,361개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나 부담하는 법인세는 전체의 78.3%에 달함
- 반면, 자산규모 50억 원 미만 법인은 30만 2,165개로 전체 법인수의 90.7%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 세액은 2조 2,034억 원으로 전체 법인세액의 8.2%에 불과함

< 자산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2005년 기준) >

(단위: 10억 원, %)

자산 규모	신고법인 수	매출액	과세 표준	총 부담세액	세액 구성비
5억원 미만	171,740	89,133	1,509	222	0.8
5억원~50억원	130,425	347,196	11,121	1,981	7.4
50억원~500억원	25,787	348,532	17,713	3,605	13.5
500억원~5000억원	4,797	360,540	22,139	4,725	17.7
5000억원 이상	564	1,021,728	74,496	16,182	60.6
합 계	333,313	2,167,129	126,978	26,715	10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주 : 총 부담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 법인세 과세표준이 물가상승, 경제규모 증대, 기업의 수익력 확대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고정됨에 따라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법인세 과표는 1990년 세제개편 때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지난 17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고 있어서,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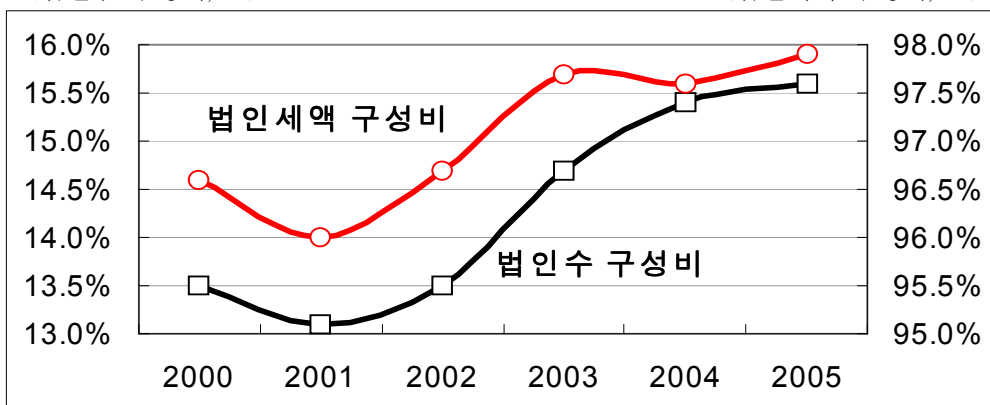
·그 결과 과표 1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의 법인수 및 법인세액 구성비도 점차 증가하여 2000년 각각 13.5%와 96.6%에서 2005년에는 15.6%와 97.9%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

< 과표 1억 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수 및 법인세액 구성비 추이 >

(법인수 구성비, %)

(법인세액 구성비,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4. 개선 및 보완 과제

○ 개선 과제

- 첫째, 주요 경쟁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법인세의 인하가 필요함
 -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의 법인세 인하가 완료될 경우 유럽 선진국들의 유효법인세율은 2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대만,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국들의 유효세율은 2003년 현재 10%~15% 수준임
 - 한국은 유효법인세율이 25% 수준으로 이를 20% 이하로 낮춰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법인에 가중되고 있는 세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 둘째, 산업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내수서비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임
 - 기존 조세감면정책을 재검토하여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비과세, 세액공제 등의 법인세 감면 제도를 내수서비스 부문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산업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내수 및 서비스 산업기반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셋째, 누진세 체계 개편을 통하여 경제 여건 변화를 세제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해줘야 할 것임
 - 지금 연매출 100억 원인 건설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과표가 통상 3억~4억 정도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1억원의 과표 기준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단계로 단순화되어 있는 누진체계를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초대형 기업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4단계 내외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함

○ 보완 과제

- 첫째, 법인세 인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내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법인세 인하만 단독으로 시행될 경우, 내외국인의 직접투자 확대 → 고용 증대 → 경기 활성화 및 법인·개인 과세베이스 확대로 연결되는 당초의 기대효과가 달성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내외국인의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신규투자 인센티브 확대,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노동 관련 제도 정비, 외국인 생활시설(전용병원, 학교) 확충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

- 둘째, 법인세 인하시 우려되는 단기 세수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징수체계 재정비, 재정 효율성 제고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함
 - 우리나라 GDP의 21%로 추정되는 지하경제(2003년 기준, 현대경제연구원 2005)의 양성화를 통하여 과세 베이스를 확대
 - 조세 징수체계를 재정비하여 2005년 기준 7조 3,964억원(국세수입의 5.8%)에 달하는 불납결손액을 최소화
 - 정부지출에 대한 사전 타당성 점검과 사후 평가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

한상곤 연구위원 (3669-4120, sghan49@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2월 생산 증가세 둔화

○ 2월 소비 부문이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산업 생산 감소, 투자 증가세 약화 등의 부진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어 경기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

- 2월 중 산업 생산은 1월중 과업이 있었던 자동차 업종의 생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에 따르는 조업일수 감축으로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함
- 또한 투자 부문의 경우 설비투자추계 증가율이 1월의 전년동월대비 15.4%에서 12.4%로 하락하였으며, 건설기성도 민간 부문의 부진으로 같은 기간 10.5% 증가에서 8.3% 증가로 둔화됨
-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월 100.6에서 2월에 100.7로 0.1p 상승하였으며, 선행지수(전년동월비)도 같은 기간 4.7%에서 4.8%로 소폭 상승함
- 비록 소비 부문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생산과 투자 등 기업 관련 부문들이 부진세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간 내 고용시장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3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6.3(1.0)	5.1(0.8)	4.8(1.2)	4.0(0.9)	-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2.7	12.4	-
		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15.4	12.4	-
		건설수주	7.3	9.0	-8.5	-14.7	37.1	27.1	9.7	40.1	-
		수출	12.0	14.4	10.6	16.9	16.3	13.8	20.8	10.5	14.0
	공급	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7.5	-0.4	-
		취업자수(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73	2,267	-
		실업률(%)	3.7	3.5	3.9	3.4	3.3	3.2	3.6	3.7	-
수입		16.4	18.4	19.7	20.4	21.1	13.0	19.8	7.3	12.1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166	61	-11	7	4	61	-4	5	-	
	무역수지(억\$)	232	161	13	48	25	75	4	10	15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1.7	2.2	2.2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1.9	2.4	2.5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주가, 환율, 금리의 트리플 강세

○ (해외 금융 시장) 엔캐리 트레이드 재개

- 금리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가 주택시장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강보합 시현 (국채 10년물 : 4.64 → 4.68%)
- 환율 : 엔화는 일본 금융기관의 3월말 결산이 완료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약세를 보였고, 유로화는 유로권의 전반적인 경제지표 호조와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 등으로 강세를 보임 (\$/€ : 1.3354 → 1.3430 ¥/\$: 117.83 → 118.74)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환율, 금리의 트리플 강세

- 주가 : 한미 FTA 협상 타결 및 글로벌 증시의 호조 등에 따른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1,483.4)를 경신하면서 전주대비 대폭 상승 (1,452.5 → 1,484.2)
- 금리 : 미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전주대비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4.76 → 4.84%)
- 환율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 전망, 수출기업들의 달러화 환전 수요 증가 및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 확대 등으로 강세 시현 (940.9 → 931.9)

○ (전망) 회사채 발행량 급증 등으로 금리의 상승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007	
		3/4	4/4	1/4	2/4	3/4	4/4	3.30.	4.6. ¹⁾
국내	거래소 주가	1,221.0	1,379.4	1,359.6	1,295.2	1,371.4	1,434.5	1,452.5	1,484.2
	국고채3년(%)	4.60	5.08	4.93	4.92	4.57	4.92	4.76	4.84
	원/달러	1,041.1	1,011.6	971.6	948.9	946.2	929.8	940.9	931.9
해외	DOW	10,569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2,560
	Nikkei	13,574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7,491
	미국채10년(%)	4.32	4.39	4.85	5.14	4.63	4.70	4.57	4.64
	일국채10년(%)	1.48	1.48	1.78	1.93	1.68	1.69	1.60	1.68
	달러/유로	1.2026	1.1849	1.2118	1.2790	1.2674	1.3199	1.3354	1.3430
	엔/달러	113.51	117.75	117.78	114.42	118.18	119.07	117.83	118.74
	두바이(\$/배럴)	56.32	53.19	59.16	67.17	57.33	56.71	63.12	64.51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4.5.) 기준